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현황과 전망

최 수 영*

- I. 머리말
- II.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현황
- III.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확대 배경
- IV.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전망
- V. 맺음말

요 약

최근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을 거의 독차지 할 기세로 비중을 높여 왔고, 중국의 대북투자자는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열기를 더해 왔다. 중국의 비공식적인 대북지원은 예상 밖으로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해 왔고, 그리고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양국의 이해가 일치하고, 북한이 생존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국가는 중국 뿐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경향은 심화되어 왔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 확대 및 북한 선점 의도, 동북3성 개발과 같은 자국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북한 활용 전략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확대시켜 왔다.

대북 자원개발 수요 증가 및 실행단계에 있는 대북 인프라 개발 등 전반적인 중국의 대중 경제적 수요 증가는 향후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대북체제는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대북체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를 견제할 수 없을 것이다.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머리말

최근 북한은 중국 일변도의 대외무역을 구사하면서 대중 경제의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도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비공식적인 대북지원을 늘리는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북·중 양국간 경제관계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 현상은 북한이 당면한 체제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을 협력 상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확대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우리의 대북 영향력은 위축되는 것이다.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는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해 남북간 경제적 유대를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 통일인 남북경제공동체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대중경제 의존이

향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조망하고자 한다.

이 글은 2장에서 북·중 무역, 중국의 대북투자, 그리고 중국의 대북지원 등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현황을 다루고 있다. 3장에서는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확대의 배경으로 북한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입장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중국의 대북 경제적 수요, 대북제제에 대한 중국의 동참 수준, 남북경협의 향배 등을 통해 향후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을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 5장에서는 이 글을 요약한다.

II.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현황

1. 북·중 무역

2000년대 들어와 전반적인 북·중관계가 복원되고 긴밀해지면서 북·중 교역규모가 급증해 왔다. 이런 북·중 교역의 확대에는 북·일 관계 악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강화 및 대북지원 축소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2008년 북·중 교역액은 27.9억 달러로 2007년 대비 41.2% 포인트(수출 29.7%, 수입 46.0% 증가) 증가하는 기록적인 신장을 보였다. 이것은 2000년 대비 약 5.7배 증가한 수치이다. 2009년 상반기 북·중 무역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 감소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8	57.3	-33.5	355.7	-52.9	413.0	-37.1	-298.4
1999	41.7	-27.2	328.7	-7.6	370.4	-10.3	-287.0
2000	37.2	-10.8	450.8	37.1	488.0	31.8	-413.6
2001	166.8	348.1	570.7	27.1	737.4	51.1	-403.9
2002	270.7	62.3	467.3	-18.1	738.0	0.1	-196.6
2003	395.3	46.1	627.6	34.3	1,022.9	38.6	-232.2
2004	585.7	48.2	799.5	27.4	1,385.2	35.4	-213.8
2005	499.2	-14.8	1,081.2	35.2	1,580.3	14.1	-582.0
2006	467.7	-6.3	1,231.9	13.9	1,699.6	7.5	-764.2
2007	581.5	24.3	1,392.5	13.0	1,974.0	16.1	-811.0
2008	754.0	29.7	2,033.2	46.0	2,787.3	41.2	-1,278.2
2009.1~6	351.8	8.2	750.1	-8.4	1,101.9	-3.7	-398.3

자료: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은 철광석, 석탄, 의류, 어패류 등 1차 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4년부터 광물성생산물과 비금속류가 수출 성장세를 주도하면서 이들 두 품목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08년 도에는 석탄 2억 달러, 철광석 1.7억 달러를 수출해 광물성생산품의 비중이 41.3%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북한의 수출상품 구조는 2000년대 말에 와서 1차 산품 위주의 후진적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대중 수입 품목은 연료(원유), 철강 및 기계류 등 산업기자재와 육류(돼지고기), 플라스틱류 등 생필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북한의 수입품목구조는 광물성생산물(25.9%), 섬유류(11.9%), 기계·전기전자(11.5%), 유지·조제식료품(8.8%), 화학공업제품(7.5%)의 순이다. 북한이 수입하는 광물성생산품의 주된 품목은 원유와 제철용 코크스로 이들 대부분은 중국에서 도입된다¹⁾. 2008년 북한은 원유 수입대금으로 4.1억 달러, 석유제품 수입대금으로

1) 북한의 원유 수입량은 1991년 총 189만 톤(이 중 중국으로부터 110만 톤)이었으나 1998년에는 60.9만 톤(중국 31.7만 톤)으로 줄어들었다. 1999년과 2000년에는 더욱 감소해 총 31.7만 톤과 38.9만 톤을 전량을 중국에서 도입하였다. 이후 2004년까지 60만 톤 내외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매년 53만 톤 정도를 전량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다. World Trade Atlas.

1.2억 달러를 중국에 지불하였다.

이러한 북·중 무역의 특징으로는 첫째,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북·중 무역이 급성장하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도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남북교역 제외)는 1998년 28.6%에서 2004년 48.5%, 2005년 52.6%, 2006년 56.7%, 2007년 67.1%, 2008년 73.0%로 증가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만성적인 성격을 띠면서 확대되고 있다. 대중 수입의 급증으로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2002~2004년 기간 매년 2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 이래 적자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2008년에는 12.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출품목이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북·중 무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대중 무역 적자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북·중 무역이 급증하면서 북한경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 북한의 산업생산은 원자재

와 에너지, 설비와 부품을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행은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산품의 중국산 비중이 70% 정도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²⁾ 다른 조사에 따르면 중국산 물품들은 북한 시장 거래에서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시장경제 확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³⁾

이 밖에도 북·중 무역의 특징으로는 지리적인 이점에 따라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동북3성 중에서는 랴오닝(遼寧)성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하다. 최근 북·중 무역에서 동북3성의 위상이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대체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중 무역에서는 과거 중국이 북한에 적용하던 우호가격과 같은 특혜는 사라졌다. 중국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등 경제적 요인들을 감안하여 상업적 베이스에서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2. 중국의 대북투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 정부는 대북 투자를 장려하고 있고, 북한도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자

2) 한국은행,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2007.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원자재와 설비의 중국산 비중은 80%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1%를 차지하였다.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 142.

〈표 1〉

중국의 대북투자 실행액

단위: 천 달러, 개

	1990년 이전	1991	1994	1998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투자액	790	48	270	160	610	2,600	1,503	3,526	8,999	14,372	14,510
기업수	2	1	1	1	1	2	4	5	8	13	14

자료: 「중국상무연감」,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각년호: 김영근, “중국의 대북 투자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통일경제』 2008년 여름호, p. 2.

마오 총리는 2004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하였다. 2004년 2월 중국은 대북 투자자문회사인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대북 진출에 나서고 있다.⁴⁾

중국의 대북투자와 관련한 북·중 양국의 노력은 2005년 들어와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5년 1월 쉐하오민 홍콩국제산업발전공사 이사장을 북한 정부의 외자유치 대표로 공식 임명하였다. 3월 북한 박봉주 총리의 방중시 북·중 양국은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 투자자산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틀을 확보하여 중국의 대북 투자에 대한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0월 방북한 후진타오 주석은 김영남 위원

장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 발전이 매우 빠르고 잠재력이 크다며 상호 이익 및 공동 발전 원칙에 입각해 양측 기업들이 여러 형식의 합작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에 실현된 중국의 대북투자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외부에 알려진 사례는 10여건이 전부였다.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공장·기업소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다.⁵⁾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투자는 2003년에 353만 달러, 2004년에는 90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1,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1,437만 달러, 1,451만 달러로 증가하였다.⁶⁾

중국의 대북투자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4) 민관영을 통틀어 북한이 유일하게 자문권한을 인정한 회사로서 형식상 민간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를 대행하고 있다.

5) KOTRA,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

6)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대북투자 합의액은 각각 1억 345만 달러, 8,634만 달러이다. 김원배 외,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 국토연구원, 2006), p. 29.

첫째, 중국이 대북 투자에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지하 광산자원 개발에 가장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무산철광에 투자해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고, 다른 광물자원(금광, 동광, 몰리브덴광, 탄광 등) 개발을 위한 투자를 추진 중이다.⁷⁾ 2008년 말 중국 '이메이집단'은 안주탄전을 대규모로 개발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였다.⁸⁾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개발 열기는 북한의 거대한 광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를 유인하고 있고, 동시에 경제 급성장에 따라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광물자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대북투자 분야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SOC개발, 유통·운수업, 수산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컴퓨터, 슬레이트, 자전거, 전기기구 등을 북한과의 협작을 통해 생산 중이다. 유통·운수업 분야에서는 평양 제1백화점 운영이 추진된 바 있고, 보통강 공동교류시장이 운영 중에 있다.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 나진항 3호 부두 확장과 나진-원정간 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압록강 유역에 문악발전소를 공동 건

설하기로 하였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북한측 투자환경의 제약 때문에 여전히 경제성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제조업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대북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지하자원 및 SOC 개발, 수산협력 등에 있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 속에서 대북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중국의 대북 투자는 현재까지 주로 보상무역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방식은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낮고, 투입산출주기가 짧으며 상호 해산도 간편하기 때문이다. 합작투자의 사례로는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와 북한 무산광산간 합작, 산둥성 초금집단과 양강도 해산청년동광간 합작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수산협력의 경우 어획고의 일부를 현물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것과 수력발전소 건설에서 중국의 투자 금액을 전력으로 북한이 지불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가 단기간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중 양국의 정책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저우

7) 중국의 대북 분야별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52-65 참조.

8) 2008년 12월 12일 허남이마메이예(河南義馬煤業) 집단유한공사('이메이집단')는 북한과 안주탄전 합작개발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이메이집단은 안주 지역에 1,000만 톤급의 탄광과 120만 톤급의 석탄화공 프로젝트 건설에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 2〉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

단위: 백만 달러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북수출	328.7	450.8	571.6	467.3	627.6	799.5	1,081.2
무상원조	48.4	27.6	69.1	16.0	10.9	14.6	38.1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사」.

추취(走出去: 투자진출정책) 정책을 통해 대북투자를 장려하고 있고, 북한도 경제개혁 조치 이후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아직까지 중국의 대북투자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 투자에 있어서도 협상 중단 사례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 투자 기업들은 생산초기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북·중 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양국 경제관계의 심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3. 중국의 대북지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중 경제관계는 대체로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 관례였다. 이런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조건하에서 양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지원은 다소간 파고를 겪기는 했지만 지속되어 왔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

해 항상 특혜를 부여해 왔다.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는 2001년 6,910만 달러를 정점으로 2004년까지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상원조의 비중(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는 중국의 대북 수출에 포함되어 있음)은 2001년 12.1%에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1.7%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5년 대북 무상원조는 3,810만 달러로 늘어나 대북 수출에서의 비중은 3.5%로 높아졌다.

한편 중국은 비공식적(공식적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이란 용어 사용)으로 북한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북·중 정부는 양국 관계 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관계 복원에 노력하였다. 중국은 1994년부터 대북원조를 재개한 바 있고, 1996년 5월 홍성남 총리가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대북원조를 포함하는 '경제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는 향후 5년간 중국은 북한에 곡물 50만 톤, 석유 130만 톤, 석탄 250만 톤을 절반은 무상으로, 절반은 국제가격의 1/3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비공식적 대북 지원은 1990년대 후반 북한과 중국이 과거의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이후 양국의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인사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북·중 우호협력관계가 한층 긴밀해짐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무상지원하기로 약속했거나 제공한 비공식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9년 6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규모 외교사절단의 방중 시 중국은 식량 15만 톤과 코크스 40만 톤(총 5,000만 달러 상당)을 무상 지원하였다. 2001년 장쩌민 국가 주석이 방북, 식량 20만 톤과 디젤유 3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톤당 가격을 옥수수 100달러, 쌀 270달러, 디젤유 300달러로 적용할 경우 옥수수와 디젤유 제공시 2,900만 달러, 쌀과 디젤유 제공시 5,400만 달러 상당)하기로 하였다. 2002년에는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4.15)을 맞아 북한에 5,000만 위안(약 6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04년에는 남포시 대안친선 유리공장 신축비로 2,4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약 20억 달러의 장기 원조를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 인사의 상호 방문 시 중국이 북한에 약속한 지원의 상당 부분은 공식적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동시에 상당 부분은 누락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의 대북지원에서는 공식적 지원보다는 비공식적인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은 중국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서 대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의 대중 무역 불균형에 대해 분석하면서 중국의 대북 원조가 2004년 이후 4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대북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최근 급격히 확대되었다.

9) KOTRA, 「북한경제속보」, “중국내부에서 나오는 대북 관계 재고에 대한 목소리,” 2009.6.4.

Ⅲ.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확대 배경

가.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북·중 이해 일치

탈냉전기 북·중 양국은 ‘혈맹관계’가 아닌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실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협력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점차 악화되는 동북아지역 강대국간의 관계 및 북한 문제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시켜 왔다.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미·일의 중국 견제는 중국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정권의 취약성으로 인해 북한이 예상치 못한 사태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져 왔다. 중국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면 동북아지역에서 완충지대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편입되거나 한국 주도의 통일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중국의 정책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다.

중국은 2020년 ‘소강사회(小康社會)’ 달

성을 위해 경제성장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대외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중국에 있어 북한은 자국의 경제 개혁·개방정책과 대외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을 살리는 것, 최소한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이런 자국 이익의 확보를 위해 중국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기존의 관망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¹⁰⁾ 중국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북한을 궁지로 몰아 북한체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2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북·중 양국은 포괄적 협력을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핵문제 이외에도 개혁·개방, 탈북자, 동북진흥계획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의

10) 중국은 2003년 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50여회 이상 메시지 전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변국을 6자회담에 합류하게 하였다.

정치적 안정을 바라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방지 및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견제하는 한편,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것은 북·중 양국의 상호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

2001년 부시행정부 등장 이후 북·미 관계는 악화되었고, 더욱이 2002년 2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었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등으로 지칭하고 북·미간 접촉을 중단하였다. 미국은 대량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강화해 북한의 무기 수출과 마약 밀매 루트를 차단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동참하면서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보복성 경제제재를 강화해 왔다.¹¹⁾

북한은 미국의 압박정책에 대응하여 핵동결 해제와 핵보유 선언 등 ‘벼랑끝’ 외교를 펼쳤으나 결국 중국의 중재 하에 6자회담에 참가하여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다. 북

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9.19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인권, 마약, 위조지폐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왔다.

김정일 정권은 국제적인 고립 상황에서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유대를 강화해 당면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고자 한다. 북한은 핵문제로 미·일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자 중국에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중 관계 강화를 통해 대미 협상력 제고 및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및 협력을 통해 당면한 경제난 해소와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관계 확대에만 매달리는 것은 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혈맹관계,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한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보다는 중국과의 거래가 훨씬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11)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북한선박에 대한 입항조건 및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북제재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에 따라 최근 북·일 무역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전략적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한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를 허용하고 있지만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¹²⁾ 북한은 실리적인 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비우호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북한의 선택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대북제재의 지속 및 강화는 중국에게는 대북 경제적 영향력 증대의 기회로 작용해 왔다. 과거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일본은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대북제재에 따르는 반사이익을 향유하면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을 확대해 왔다.

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북한 선점 의도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묶으로써 북한이 중국에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더욱 의존하게끔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

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자국의 세력권 하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지역 패권세력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뿐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 줌으로써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한이 다른 국가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향후 전개될 한반도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려 하는지도 모른다. 북·중 경제관계 강화에 따른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이 급속히 심화되면서 북한경제가 중국에 예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북 경제전략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북 진출이 확대되고 대북 경제적 영향력 증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중국에 잠식당할 수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2004년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경제·무역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이 북한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적극 장려한다'고 표명했다.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직전 북한을 먼저 방문한 우이(吳儀) 부총리는 박봉주 북한 내각총리와 가진 회담에서 향

12)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 70.

후 경제·무역과 관련해 양측 정부가 책임지고,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3개 원칙에 합의했다.

중국과 북한의 협력은 2006년 들어와서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5년 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종전의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할 계획이다.¹³⁾ 원자바오 총리도 1월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국 경제교류 협력방침인 3개 원칙을 또다시 천명하고, “중국 정부가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과거 지방정부의 묵인 하에 제한적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하던 경제교류방식과는 다른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협력에 태동한 것이다.

중국이 동북3성 개발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국 경제권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동북4성의 하나로 만들어서 사실상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음모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북4성론 또는 위성국가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중국자본의 대북 진출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방침과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들고 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북한의 투자환경은 대단히 열악해 대부분 선진국들은 북

한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 전반적인 북한의 투자환경은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높은 물류비용, 생산제품의 판로 제한 등으로 외국투자가를 유치하기에는 매우 불리하다. 체제의 경직성에 따른 기업경영에서의 제한 및 법·제도의 성실한 집행에 대한 우려 등도 외국자본 유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핵문제와 같은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도 북한을 투자대상국에서 사실상 제외시켜 왔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 북한을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투자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북한에 진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짧은 기간에 북한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 형성될 미래시장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현재가 중국의 70년대 말 80년대 초와 비슷하며 지금 조선에 진입하는 것이 시장을 점령함에 있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중국 관리의 말은 중국자본의 북한 선점 논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¹⁴⁾ 중국이 동북3성 개발을 발전시켜 아예 북한경제를 자국 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북한을 선점하려 한다는 것이다.

13) 중국은 2006년부터 시작되는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에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해 대북지원을 추진하기로 북한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교도통신』, 2006.2.25.

14) 푸젠(福建)성 대외경제무역청 대표로 베이징에 근무하는 왕웨이리(王位力) 주임이 발언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북한 선점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중 경제관계가 비약적으로 신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남북경협도 대단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남북교역의 지속적인 성장, 금광산관광사업의 추진, 개성공단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한국은 북한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30만 톤 정도의 비료를 무상 지원했고, 식량난 완화를 위해 30~40만 톤의 쌀(곡물)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해 왔다.

이런 한국 정부의 남북경제관계 강화 움직임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 및 북한 선점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진행되어 온 남북경협의 확대와 대규모 대북지원은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을 높여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을 어느 정도 상쇄해 왔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 확대와 북한 선점에 보다 효과적으로 나서기 위해 한국과 경쟁하면서 북한과의 교역과 투자를 더 빨리 늘여왔다. 그 결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남북경협의 확대 속에서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라. 중국의 경제적 수요에 따른 북한 활용전략

북·중 경제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 확대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은 소극적인 경제지원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경제에 적극 개입해 활용하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자국산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 주요 에너지 및 원자재의 부족에 직면한 중국은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는 중국의 국가전략 중 하나인 저우추취(走出去: 투자진출정책)와도 맥이 닿아 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 진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접경국인 북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2003년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期3中全會)에서 동북3성 지역의 개발계획을 국가적 중점사업으로 확정하였다. 이 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공동 발표한 ‘동북지역 등 노(老)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의견「2003」)’ 속에 동북3성 진흥계획은 구체화되었고 2004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장쩌민 정부가 서부대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했듯이 라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헤이룽장(黑龍江)성을 포함하는 동북3성 진흥계획은 후진타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등장하였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05년 6월 '동북 노(老)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의견'2005)」을 추가로 내놓았다. 의견'2005」의 주요 내용은 동북3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외개방의 가속화, 핵심산업 육성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 동북3성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협력의 추진 등이다. 특히 의견'2005」에는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의 변화는 동북3성 개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동북3성은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과정에서 소외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한 지역이다. 중국은 동북3성을 육성하려면 인접한 북한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시에 동북3성 개발과정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자본집약적 중화학공업이 집중된 동북3성 지역은 발해만에 면한 라오닝(遼寧)성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

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동북3성 개발은 인접국가인 북한에게는 지역경제협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과 동북3성 간 운송·물류 인프라의 연결, 자원의 공동 개발 및 활용과 같은 각종 프로젝트들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 접경지역 북한 도시들의 경제활동 및 산업생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양국 접경지역의 동반성장을 통해 북한의 자원을 신속하게 동북3성으로 수송하고, 동북3성에서 생산한 제품을 북한을 통해 해외로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북·중 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경제전략의 변화를 '선의의 동반성장론'이라 설명한다.¹⁵⁾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은 이 지역의 자본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체된 국유기업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하며, 실업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도 해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¹⁶⁾ 동북3성 개발계획은 이 지역 국유기업 지원 및 인프라 건설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의 발주, 조세 및 재정지원,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 3가지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더불어 동북3성은 자원, 교통, 지정학적 위치, 축적된 산업자원 및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15) 「동아일보」, 2006.3.22.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중국경제년보」, p. 110.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이 2004년 들어와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와의 정치적 안정 도모 및 경제교류 확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¹⁷⁾ 중국 발전전략상 자체 필요성에 의해 입안·추진되고 있지만 동북3성 개발계획은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간 경제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동북3성 진흥계획은 후진타오 체제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제11차 5년(2006~2010)의 계획 강요’ 속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동북부의 동변다오(東邊道) 철도와 성과 성 사이 도로, 운수, 통로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일체화를 촉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북3성도 각각 성별 11차5개년 계획에서 의견「2005」와 중앙정부의 11차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북·중 경제협력의 기반이 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라오닝성과 지린성은 의견「2005」의 내용을 성별 11차5개년 계획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IV.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전망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확대 여부는 북·중 경제관계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에 달려있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유지가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위기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는 지속해 나갈 것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시기, 특히 200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를 통해 대북 영향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용인해 왔다. 국제적인 고립 속에서 북한이 체제 수호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협력 상대로 중국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에너지, 식량, 생필품을 조달해야 했고, 생산과 수출 증대를 위해 중국의 투자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북한은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상대적으로 북측에 다소 유리한 방식을 취했을 따름이다.

북·중간 상호 이해가 맞물려 있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의 심화는 불가피하다. 북한체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핵문제 해결은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북한을 둘러싼 여건들에 큰 변화가 없다면 북·중 경제관계는 지금과 같은

17) 김주영, 「중국의 동북3성 재건과 우리의 진출방향」,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p. 32-36.

추세를 유지하면서 지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북·중 경제관계는 앞서 살펴 본 중국의 대북 경제적 수요,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중국의 동참 수준, 그리고 남북경협의 향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대북 경제적 수요는 향후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대북 경제적 수요는 북한 내 철광석 등 광물자원의 개발을 통해 일부 충족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대외직접투자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국내 자원 부족의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¹⁸⁾ 이 중에서 대북투자와 관련한 자원 부족 완화 항목에는 중국의 공업화, 특히 중화학공업의 진전에 따른 향후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부족에 대비하여 기업의 국제화 진전 및 해외자원 활용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낙후한 동북3성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막 시작한 단계이다. 2005년 6월 중국 국무원 관공처 결정에 따

라 동북3성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접경지역인 북한의 신의주와 라진·선봉지대가 동반 성장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¹⁹⁾ 이를 반영하듯 중국은 라진항의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라진항에서 중국 국경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정비해 동북3성에서 동해로 통하는 물류루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단동시는 발전계획위원회 보고서(2005. 8.10)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인프라 건설과 수출가공구 조성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계획에는 중국과 북한을 잇는 차량전용도로인 압록강대교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의견「2005」의 후속조치이다.²⁰⁾ 지린성의 경우에도 두만강 개발계획, 훈춘-나선의 도로, 항만, 지역 일체화(路港區一體化), 변경무역과 호시무역의 발전 추진 등을 11차 5개년 계획에 담고 있어 북·중 경제협력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전반적인 중국의 경제성장과 동북3성 개발에 따라 중국의 북한 자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 왔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북 자원개

18) 김영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통일경제』 2008년 여름호, 재인용,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중국기업의 국제화전략 보고」 (2007.11).

19) 2005년 6월 공포된 중국 국무원 관공청 제36호 문건 「동북노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실시의견」의 내용에는 ① 국유기업의 개혁, 공공사업에 대한 외자도입 촉진, 국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취업문제 해결 등 동북진흥의 촉진과 관련된 중국정부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고, ② 중국이 대외원조를 행하는 경우 동북지방의 국경을 접하는 도로와 공항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를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방침도 수립하고 있다.

20) 실시의견의 내용에는 ① 국유기업의 개혁, 공공사업에 대한 외자도입 촉진, 국경지역의 경제 활성화, 취업문제 해결 등 동북진흥의 촉진과 관련된 중국정부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고, ② 중국이 대외원조를 행하는 경우 동북지방의 국경을 접하는 도로와 공항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를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방침도 수립하고 있다.

발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어 향후 중국의 이 분야에 대한 대북투자는 늘어날 것이다. 동북3성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중국의 대북 인프라 투자도 계획에서 벗어나 실행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북 경제적 수요는 북한의 자원 및 인프라, 여타 분야에 대한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를 가져와 향후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 관련한 중국의 참여 수준에 따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주변국의 핵 보유 움직임이 가시화되어 동북아 정세가 자국에 위협적으로 전개되는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대한 중국의 참여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 1718호 채택(2006.10.14) 이후 북·중 경제관계는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심화되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의 움직임은 1차 핵실험 때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²¹⁾ 2차 핵실험을 감

행한 북한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 강경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식인 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은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²²⁾ 새로운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안 1874호(2009.6.12) 채택에는 중국도 참여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고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및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 강경노선을 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주장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북한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북제제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회원국, 특히 중국의 유엔 결의안 이행여부가 관건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제가 강화되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북·중 무역은 급속히 커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제제 실행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

21)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제 결의 이후 북한에 대해 화물검사를 꼼꼼히 하는 등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2009.6.18; 중국 단둥시 세관은 철 강화용 전략적 금속인 바나듐(vanadium)을 싣고 북한으로 입국하려던 트럭을 2009년 7월 27일 압류했다. 이것은 중국이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제 결의 조항을 준수한데서 나온 결과이다. North Korean Economy Watch, Associated Press, 2009.7.28.

22)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신문인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외교정책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대북제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10명은 강력한 대북제제에 찬성하였고, 나머지 10명은 반대하였다. KOTRA, 『북한경제속보』,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대북 관계 재고에 대한 목소리,” 2009.6.4.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이해에 직결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보다는 북한체제(정권)의 붕괴를 중국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유엔 주도의 대북제제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실질적인 대북제제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을 적당히 압박하는 노선을 취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핵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결의와는 달리 중국의 대북제제, 특히 교역부문에 대한 조치는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 수준은 유지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을의 진전 여부에 따라 상대적인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지난 시기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은 북한경제를 지탱해 온 두 축이라 할 수 있다. 북·중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을 심화시켰고,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성장은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의 확대를 가져왔다. 중국과 한국은 북한경제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여 왔다는 평가도 있다. 햇볕정책으로 일궈어지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경협을 추동했고, 북·중 경제관계는 이런 남북경협 확대에 자극을 받았다.

그러나 북·중 경협과 남북경협의 동반 확대 구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아 흐트러졌다. 전반적인 남북경협사업이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대북 경제관계는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구상을 기초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남북 당국간 경협사업과 대규모 대북지원은 사실상 유보되거나 중단되었다. 현 정부의 남북경협은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추진 탄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남북경협의 추진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한국은 남북경협을 독자적으로 확대시킬 명분이 제한적이다. 북한 핵문제의 진전이 더딜 경우 남북경협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관계의 일부를 중국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중국도 이런 기회를 포착해 북·중 경제관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절대 규모와 상대적 비중에서 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남북경협은 추진력을 회복해 가

속화가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젠’ 구상에 북한이 화답할 경우 남북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실제 이행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의 상대적 비중조차 악화시키지기에는 역부족이다.

V. 맺음말

북·중 경제관계는 200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팽창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역의 거의 독차지 할 기세로 비중을 높여왔고, 중국의 대북투자는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열기를 더해왔다. 최근 북한의 대규모 대중 무역적자를 감안할 때 중국의 비공식적인 대북지원은 예상 밖으로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하에서 체제생존을 위해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왔고, 그리고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의 배경에는 북한체제 유지에 대한 양국의 이해 일치자리 잡고 있다. 대북제제와 같은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북한이 생존을 위해 기댈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런 기회를 포착한 중국은 대북 영향력 확대 및 북한을 선점하기 위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동북3성 개발과 같은 자국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북한경제에 적극 개입해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북·중 경제관계에 따른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의 심화 여부는 중국의 대북 경제적 수요, 대북제제에 대한 중국의 동참수준, 그리고 남북경협의 향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대북 인프라 개발은 실행단계에 있어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중 경제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 경제적 수요는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해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제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실질적인 대북제제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제제는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현 수준은 유지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경쟁하면

23)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외교협회(CFR) 기자회견(2009.9.21)에서 ‘그랜드 바젠’ 구상을 제안했다. 이 구상은 북한이 핵 폐기라는 최종목표에 합의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에게 정치·경제적 대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해 온 남북경협은 북한 핵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남북경협이 처한 이런 상황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로 귀결될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핵문제 해법에서 북·중 간 균열이 생길 경우에 북·중 경제관계에

도 영향을 미쳐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약화될 것이다. 2차 핵실험 이후 중국 내부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만약 올해 북·중 무역이 상당한 감소를 보인다면 중국과 북한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근, “중국의 대북 투자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통일경제』, 2008년 여름호.
- 김원배 외,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 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서울: 국토연구원, 2006.
- 김주영, 『중국의 동북3성 재건과 우리의 진출방향』,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04.
-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한국은행,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200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중국경제년보』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 『중국상무연감』
- 『중국해관총서 통계사』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 _____,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
- _____, 『북한경제속보』, “중국내부에서 나오는 대북 관계 재고에 대한 목소리”, 2009.6.4.
- 『교도통신』, 2006.2.25
- 『동아일보』, 2006.3.22
- 『요미우리신문』, 2009.6.18
- North Korean Economy Watch, Associated Press, 2009.7.28